
기획조정실 기자 간담회

2022. 12. 21.

||| 목 차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	1
2.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	3
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6
4. 인천 고등·해사 법원 유치 추진	7
5. 2023년도 본예산 편성	8
6. 2023년 국비 확보 계획	10
7.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11
[첨부] 2022년 지방세 징수현황	13

☐ 추진개요

- (기간/장소) 2022.12.26.(월)~12.30.(금)/시장님 소접견실 등
- (보고대상) 실·국(부서), 사업소·출장소 등 전부서
- (참 석) 시장님(주재), 양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보고자) 및 부서장 등
- * (배석) 정책기획관(사회), 비서실장, 평가담당관 등
- (보고방식) 실·국별 주요업무·현안 보고 및 종합토론
- ※ 각 분야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향후계획

- 2022.12.22. : 분야별 2023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 2022.12.26.~12.30 : 분야별 실국 주요업무 보고
- ※ 2023.1월중 공사공단 및 주요 출자출연기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예정

참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정(안)

일 시			분야별	실 · 국	비고
12.26. (월)	10:00~11:00	60'	① 원도심·교통	①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접견실
	14:00~14:50	50'		② 도시계획국	"
	15:00~15:50	50'		③ 도시재생녹지국	"
12.27. (화)	10:00~11:00	60'	② 경제	① 경제산업본부	"
	16:00~17:00	60'		②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청 도시개발 집무실
12.28. (수)	09:50~10:50	60'	③ 환경·안전	①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접견실
	11:00~11:30	30'		② 시민안전본부	"
	13:30~14:30	60'	④ 문화·글로벌· 해양항공	① 문화체육관광국	"
12.29. (목)	10:30~11:30	60'		②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해양항공국	"
	14:00~14:50	50'	⑤ 복지·가족· 건강보건	① 복지국	"
	15:00~15:50	50'		② 여성가족국, 청년정책담당관실	"
12.30. (금)	10:30~11:30	60'		③ 건강보건국, 상수도사업본부	"
서면 보고 (15)	시정혁신담당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실,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행정국,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 주요업무보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 개편개요('23.2.6.)

○ 개편배경

- 민선8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포용성과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
- 인천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구증설 여건을 반영
- 존치 기간이 도래한 한시기구 폐지 등 부서 기능 재편

○ 주요개편 방향

- 원도심의 혁신적 균형발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구현할 **글로벌도시국 신설**
-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지역총생산 100조 시대를 창조할 **미래산업국 신설**
- 시정의 주요사항을 시민과 적극적으로 공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기능 확대를 위한 **홍보본부 신설**
- 시민의 안전범위를 보건영역으로 확장,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시민안전 전담 기능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인천 구축
 - ▶ 안전상황실, 안전예방과, 환경안전과, 교통안전과, 원산지수사팀(특사경)
- 그 밖에, 한시기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전담 부서 신설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개편
- 시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정원 확보 및 증원

☐ 그동안 진행사항(붙임 참조)

- 조직개편안 수립 및 입법예고 : '22.12.

☐ 향후 추진계획

- ('23. 1.) 기구.정원 조례안 시의회 심의.의결
- ('23. 2.) 기구.정원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23. 2.) 조례.규칙 공포 및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안인호(2151) / 담당자 원윤호(2152)
------	-------------	--------	---------------------------

붙임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참고 자료

□ 기구 증설 여건

-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에 따라 기구 설치 기준 상위구간 적용 가능
- (기준)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의 상위구간 적용 가능

구분		실 · 국 · 본부의 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 (요건) 동일구간 인구수 2년 연속 증가 + 계산식*의 인구수 초과

(인천시 구간 250~300만 계산식 인구수 295만)

*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 (해당 구간의 최대인구수 -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 90/100

□ 자율신설기구 운영

- (개념)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의 특례조항(대통령령)에 따라 실.국의 법정 수를 초과하여 운영이 가능한 제도
-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 범위내 추가 설치
 - (현행) 14국 × 20% = 2국 ⇒ (향후) 15국 × 20% = 3국(증 1국)
 - 2년 운영 후 자체평가를 통해 연장.상시.폐지 결정
- (운영) 현재 2국 → 3국(증 1국)
 - (지정)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19.8.5.~'21.7.14.) → 연장 (~'23.7.14.)
 - (계획) 글로벌도시국('23.2~'25.2.) 추가 운영 예정

※ 행안부 승인으로 존속여부가 정해지는 한시기구와 상이함

참고 1 기구개편 세부내용

□ (세부내용)

○ (실·국·본부 변경) 1실 4본부 11국(16국) ⇒ **1실 3본부 14국(18국)**

- (신설 3) 1본부, 2국 (홍보본부, 글로벌도시국, 미래산업국)
- (폐지 1) 1본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변경 1) 경제산업본부 → 경제국

연번	현 행	개 편	비고
1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폐합
2	-	홍보본부	신설
3	-	글로벌도시국	신설
4	-	미래산업국	신설
5	경제산업본부(2급)	경제국(3급)	개편
6	건강보건국	보건국	개편
7	교통건설국	교통국	개편
8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균형국	개편

○ (실·과·담당 변경) 108과 → **109과**(12과 통폐합, 13과 신설, 1 TF 신설)

연번	현 행		개 편	비고
	소관	부서명칭		
1	시장	대변인	홍보본부 홍보담당관	이관
2		글로벌도시기획단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	이관
3		제물포리네상스기획단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리네상스기획과	이관
4	행정부시장	공보관	홍보본부 공보담당관	이관
5		도시브랜드담당관	홍보본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관
6		도시디자인단	글로벌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이관
7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국 청년정책과	이관
8	기획조정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과	이관
9		데이터혁신담당관	미래산업국 데이터산업과	이관
10		스마트도시담당관	글로벌도시국 스마트도시과	이관
11	행정국	민간협력과	자치행정과	통폐합
12		(행정체제개편TF)	행정체제혁신과	신설
13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안전상황실	개편
15		재난상황과		통폐합
14		-	안전예방과	신설

연번	현행		개편	비고
	소관	부서명칭		
16	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안전과	개편
17		수질환경과	수질하천과	개편
18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자원순환정책과	환경국 자원순환과	개편
19		자원순환시설과		통폐합
20		매립지정책과	환경국 매립지정책과	개편
21		에너지정책과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이관
22	교통건설국	택시정책과	교통국 자동차관리과	개편
23		교통관리과		통폐합
24		-	교통국 교통안전과	신설
25		건설심사와	도시균형국 건설심사와	이관
26	경제산업본부	투자창업과	-	폐지
27		산업진흥과	-	폐지
28		전략산업과	-	폐지
29		사회적경제과	경제국 공정사회경제과	개편
30		농축산유통과	경제국 농축산과	개편
31	미래산업국	-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신설
32		-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신설
33		-	미래산업국 반도체바이오과	신설
34		-	미래산업국 산업입지와	신설
35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	통합
36		섬발전지원과	-	통합
37		해양친수와	-	통합
38		(섬+해양)	섬해양정책과	신설
39		(항만+연안)	항만연안과	신설
40		-	서해5도특별지원단(TF)	(TF신설)
4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과	개편
42		캠핑마켓과	군부대이전개발과	개편
43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개편
44		고속도로재생과	도시균형국 인천대로재생과	개편
45		주거재생과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개편
46	글로벌도시국	-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신설
47		-	투자유치과	신설
4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개편
49		문화콘텐츠과	-	통합
50		관광진흥과	관광정책과	개편
51		마이스산업과	(관광정책과)	통합
52		-	예술정책과	신설
53		-	문화기반과	신설
54	복지국	보훈과	보훈정책과	개편
55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인구가족과	개편

참고 2 정원 조정 세부내용

○ 정원 변경

- 정원 총수 변동 : 7,530명 → 7,541명(증 11)

▸ 집행기관의 정원 : 3,983명 → 3,983명(증감 0)

▸ 소방공무원 정원 : 3,405명 → 3,405명(증감 0)

▸ 의회사무처 정원 : 118명 → 129명(증 11)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24명 → 24명(증감 0)

- 직급별 정원 현황 : 7,530명 → 7,541명(증 11명)

▸ 일반직 : 3,878명 → 3,889명(증 11)

· 2·3급 : 3명 → 2명(감 1)

· 3급 : 20명 → 23명(증 3)

· 4급 : 160명 → 161명(증 1)

· 5급이하 : 3,684명 → 3,692명(증 8)

⇒ (일반직 정원조정) 2·3급(-1), 3급(+3), 4급(+1), 5급이하(-3), 6급 (+11)

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상·하반기)
- (지원내용)
 -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및 미취업 졸업생* ※ 다자녀 가구 학생: 소득제한 없음
-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차감
- (지원인원) 연 4,000여명
- (총사업비) 335백만원(시비 100%)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대상 확대(2023. 1. 1. 시행)

지원대상		2022년	2023년	비고
대학생		대학생(대학원생 미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원생 신규 지원
미취업 졸업생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 졸업생 지원기간 확대
	대학원생	-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졸업생 신규 지원

※ 거주지 기준 및 소득기준(변동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2023. 1. ~ 5.
 - * 공고(1월말), 신청·접수(2~3월), 검토·심사(4월), 선정·지원(5월)
- 2023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2023. 7. ~1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재양성담당 이은정(2191) / 담당자 김진희(2193)

4 인천 고등·해사 법원 유치 추진

□ 필요성

-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채널을 단일화하여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 및 강화하여 인천지역내 법원 설립 신속 추진

※ 지역경제파급효과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 2,047명

□ 주요내용

- 법원유치 TFT 구성('22.12.16.구성, 법원유치 총괄 ⇒ 법무담당관)
 - 단장(행정부시장), 부단장(시정혁신관), 4개반(고등법원 유치반-법무담당관, 해사법원 유치반-해양항만과, 시민운동반-시민소통담당관, 언론홍보반-대변인, 공보관)
- 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추천에 따른 위촉, 30명 이내)
 - ※ 【명칭】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가칭)
 - ※ 【대상】 정치계(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법조계(인천지방법변호사회), 향만계(인천항 발전협의회), 학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천대), 경제계(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시민단체(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등
-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국회의원, 지역법조인, 시민단체 등)
 - 법원 설립 필요성,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토론
- 공조체계 구축(국회의원, 인천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
 -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업무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조체계 구축('22. 12월 ~ '23. 1월), 서명운동 및 서명부 전달('23. 2월 ~ 6월), 토론회 개최('23. 하반기), 홍보(연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신소영(2291) / 담당자 박은형(2292)
------	--------------	------	---------------------------

5 2023년도 본예산 편성

□ 기본방향

- 시민 행복과 직결된 생활밀접 사업 우선 재원배분
-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

※ 역대 최대 규모 예산('23년 13조 9,157억원 → '22년 13조 1,442억원, + 5.87%)

□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도약을 향한 예산편성

[예산규모] 13조 9,157억원 [일반회계 10조 425억원, 특별회계 3조 8,732억원]

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3.21조원]	① 일자리 및 지역산업 육성 : 0.42조원 ② 소상공인 회복 지원 : 0.27조원 ③ 농가 및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 : 0.10조원 ④ 경제자유구역 지속 발전 : 0.98조원 ⑤ 인구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 1.44조원
② 함께 하는 따뜻한 인천 [4.81조원]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3.25조원 ②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 : 0.92조원 ③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0.47조원 ④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 0.17조원
③ 세계초일류 도시기반 조성 [2.94조원]	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 0.64조원 ② 원도심 도시재생 확대 : 0.56조원 ③ 저탄소 기반 친환경 도시 : 0.53조원 ④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1.21조원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조기배정 및 신속집행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계획 수립('22.12.22.) 및 조기배정
 - 각 사업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주기적(월별) 모니터링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고태수(2251) / 담당자 채은자(2252)

참고

2023년 예산편성

○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3.21조원 투입

- 인천e음 캐시백 2,019억원(5~10%), 희망인천 소상공인·소공인 특례보증 신설
- 청년 해외창업가 10명 양성(10억원, 임기내 100명 육성)
-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16억원, 패키징분야 지원 등)
- K-바이오 랩허브(67억원), 로봇 실증지원센터(41억원) 신규 착수

○ 함께 하는 따뜻한 인천을 위해 4.81조원 집중 투자

▶ (촘촘한 사회안전망)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 디딤돌 안정소득(220가구 → 310가구), SOS긴급복지(2,777명 → 3,148명)
- *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23.3. 96명 규모),
시립요양원 준공('23.7. 104명 규모)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국비시설 인건비 차액보전(286개 시설 1,719명 대상 97%→100%)
 - 복지점수 일괄인상(10호봉 미만/이상) : 15만원/20만원→20만원/30만원

▶ (안전도시, 인천119)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안전기능 강화

- * 시민안전보험 가입지원, 재난·방범용 CCTV 509대 설치, 여성안심거리 2개소 신규조성
- * 검단소방서 신축('23.1.), 소방헬기 1대 교체, 소방차량 36대 보강·교체 등

▶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호국·보훈도시)

- * 파크골프장(계양구, 서구) 신설, 펜타포트 음악축제(11 → 14억원),
디아스포라영화제(7 → 10억원), INK콘서트(8 → 10억원) 등 규모 확대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확대(보훈수당 2만원 ↑),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확대(0.5 → 3.3억원) 등

○ 세계초일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2.94조원의 재원 반영

- 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준공영제 2,000억원 재정지원
- 장애인 전용콜택시(193대→215대), 자녀안심 그린숲(6개→10개)
- 내항 1·8부두 우선개방(30억원), 반려동물공원 조성(1곳, 임기 내 6곳)

6

2023년 국비 확보 계획

□ 2023년도 목표액 : 5조 3,500억원 이상

○ 국고보조금 4조 5,000억원*(국가직접사업 포함) + 보통교부세 8,500억원**

*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6.5% 반영('22년 목표액 42,000억→'23년 목표액 45,000억)

** 「보통교부세 1조」 확보 추진계획('22년 8,000억원 → '26년 1조원), 매년 500억 ↑

□ 그동안 진행사항

○ '22. 2. ~ 4. : 국비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2. 4. ~ 12. : 국비신청(시→중앙부처) 및 중앙부처·국회* 지원 건의

* (예산협의회, 7회) 국토부(1), 기재부(1), 지역국회의원 정책간담회(1), 정당 예산정책 협의회(2), 인천시당 당정협의회(2) 등 / (개별면담, 6회) 기재부 부총리(2), 예결위원장(1), 예결위간사(3) 등 / (유선건의, 10회) 기재부 간부(6) 및 예결소위 위원(4) 등 / (방문 건의, 214회, 646명) 중앙부처 132회, 331명 / 국회 82회, 315명

○ '22. 1. ~ 12. : 교부세 T/F 운영(제도개선 건의*, 통계정비, 감액대응)

* ① 폐기물처리 반영률 상향 개선(10%→20%) ② 지자체간 협력사업 확대(30%→50%)

③ 전력 초과생산량(외부비용)을 미세먼지 수요에 추가 반영

※ 시(시장, 부시장, 실장 등) → 행안부 건의 : 18회(방문 12회, 유선 4회, 서면 2회)

□ 2023년도 확보 전망 : 5조 8,140억원 이상

○ 국고보조금 4조 9,640억원(정부안 기준) + 보통교부세 8,500억원

- (국고보조금) 국회 예산안 추가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인 사업

*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금(48→96억원, 48억 ↑),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30억원, 28억 ↑),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원, 순증),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5→105억원, 100억 ↑) 등

- (보통교부세) 지방세 큰 폭 증가('21년 정산분 4,600억원)로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 하나, 제도개선* 추가 반영 등 노력

* 지자체간 협력사업 확대 반영(30%→50%) 180억 추가 확보(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등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 감	
합 계	53,380	58,140	4,760	8.9%
국고보조금	44,480	49,640	5,160	11.6%
보통교부세	8,900	8,500	△400	△4.5%

□ 향후 추진계획

○ 예산 심사 동향 확인 및 추가 확보 노력 : 예산안 확정 시까지

담당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서용성(1661) / 담당자 민경화(1664)

7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 지역개발기금 개요

- (재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기타운영수익
- (활 용)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 (매입대상)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허가, 공사·물품 등 계약
- (규 모) 연간 1,589억원

□ 제도개선 주요내용

- ① (조례개정) 발행규모 축소 : 계약체결 매입면제 기준 상향(200만원→2,000만원)
 → 조례개정 시행일은 '23. 3. 1일이나 '23. 1. 1일부터 사전면제* 시행 예정
 * 市 의회 행안위 사전보고('22.12.5), 고시 예정('22.12.26)
- ② (금리인상) 표면금리 : 1.05% → 2.5%(1.45%↑), '23. 1. 1일부터 시행
 ※ 우리시 2,000cc 미만 신규등록 차량 채권매입 면제 기시행 중('16년부터~)

□ 개선효과

- (채권발행 축소로 채무 감소) 연 41억 원 추정
- (시민) ① (계약금액 상향) 소상공인 25,000명, 연41억원 부담완화
 ※ 25,000명(전체 계약 매출채권 건수의 70% 차지)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
- ② (채권금리 인상) 시민 167,402명, 연 95억 원 추가 보장

□ 향후 일정

- (변경고시) ① 계약 체결 매입면제 기준 상향 200만원 → 2,000만원 : '23. 1. 1 시행
- ② 채권 표면금리 인상 1.05% → 2.5%(1.45%↑) : '23. 1. 1시행
- (조례개정) 계약 체결 매입면제 기준 상향 200만원 → 2,000만원 : '23. 3. 1 시행
 - 의안상정 및 의회 의결 : '23. 1. 17 ~ 1. 31(제284회 임시회)
- (규칙개정) 기금 융자율 상향 조정 등 (현재 2.5%→ 3%) : '23. 7. 1. 시행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실 부채리스크관리담당 이선희(1671) / 담당자 전주원(1674)
------	--

참고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조례)	비고(고시)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가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② 2,000cc이상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의무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2) 전가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② 대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다목적형)		
3)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대당 390,000원	매입 면제 (‘23.12.31까지)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경형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23.12.31까지)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가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매입 의무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의무
2) 전가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	취득세 과표의 3/100	매입 의무
② 대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의무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의무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경형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의무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년도 점·사용료부과액에 대해서만 5/100 매 입 이후 허가에 대해서는 매입 불요)	매입 의무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전·답)	m ² 당 1,500원	매입 의무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m ² 당 3,000원	매입 의무
다. 골프장 등록	m ² 당 60원	매입 의무
4. 각종 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입)	매입 의무 (다만, ‘23.1.1부터 ‘23.2.28까지 계약 금 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을 면제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전 등록 및 신규등록(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만 매입)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출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이전등록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출		

【참고】 2022년 지방세 징수현황

□ 징수 현황

(2022.11.30. 현재 가집계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단위 : 억원, %)

구분	'22최종예산 (A)	징수액		전년 동기대비 (C-B)	목표대비 진도율 (C/A)
		'21.11.30. (B)	'22.11.30. (C)		
합계	48,883	44,654	46,682	2,028	95.5
취득세	21,314	21,049	19,973	-1,076	93.7
지방소비세	6,714	5,522	7,297	1,775	108.7
지방소득세	8,370	6,852	8,425	1,573	100.7
그 외 세목	12,485	11,231	10,987	-244	88.0

○ 증감분석

- '22년 최종 예산액(48,883억원) 대비 95.5% 징수
- '21년 동기 징수액(44,654억원) 대비 2,028억원(4.5%) 증가

□ 징수 전망

- (향후 전망) 지방소비세 등 주요세목의 세입 증가로 '22년 세입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 될 것임
- 주요 세목별 전망
 - (취득세) 19,973억원 징수(목표 대비 93.7%)
 - 월 평균 1,816억원 징수(11월 현재), 목표액 대비 1,34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징수추이를 볼 때 목표 달성 전망
 - (지방소비세) 7,297억원 징수(목표대비 108.7%)
 - 소비·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및 세율인상(21% → 23.7%)
 - (지방소득세) 8,425억원 징수(목표 대비 100.7%)
 - 국세 10% 연동세목으로 법인소득·근로소득 증가 영향